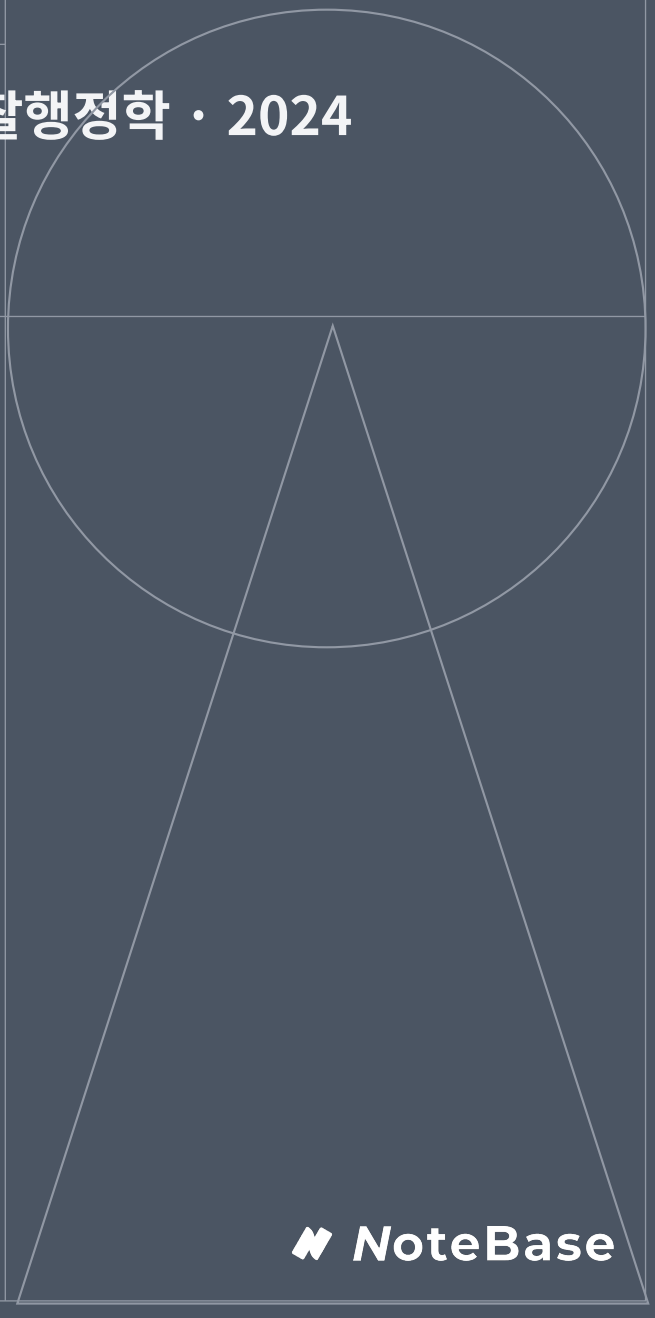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4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4

문 1. 행정이론의 전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통해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②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③ 사이먼(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가치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왈도(Waldo)는 행정원리주의를 추종하면서 행정 연구의 초점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애플비는 행정이 정책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정치과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며 양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강조했다. 정치가 행정의 과제를 정하면 행정은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그의 주장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② O: 애플비는 행정을 이미 결정된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행정에서도 정책을 해석하고 조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며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③ X: 사이먼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고,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판단은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정하는 가치판단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행정적 의사결정에 가치가 포함된다는 점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선지의 '가치만을'은 '사실을'로 고쳐야 한다.

④ X: 왈도는 행정원리주의를 비판하고 행정에 내재한 정치적·규범적 성격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다. 행정의 목표와 원리에도 가치판단이 담겨 있으므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행정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원리주의를 추종하며 효율성 추구를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는 설명은 그의 입장과 반대이다.

NoteBase

문 2.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파악하며, 사익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본다.

② 가외성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첩이나 중복성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③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효율성과 달리 비용이나 투입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비용이나 투입을 산출과 비교하는 것은 **효율성**이므로, 효과성이 비용이나 투입에 관심을 둔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이익을 단순히 합친 결과가 아니라 **사익을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로 본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서로 구별되며, 공익은 행정이 추구할 규범적 기준이 된다.

② O: 가외성은 같은 기능을 맡는 조직이나 장치를 중복·중첩하여 두는 것이다.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직 전체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③ O: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없다. 이는 자원배분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배가 공평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평등한 분배도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다.

④ X: 효과성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비용이나 인력 등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여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었는지, 같은 산출을 더 적은 투입으로 얻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효과성은 효율성과 달리 비용·투입의 크기보다 목표 달성 정도에 초점을 두므로, 비용이나 투입에 관심을 둔다는 부분이 두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NoteBase

문 3.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은 시장성은 높고 독점성은 낮다.

② 행정은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라는 특성을 지닌다.

③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관리성을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행정은 공공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치성·권력성**이 경영과 구별되는 핵심 속성이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진술 자체의 진위뿐 아니라 행정과 경영을 구별하는 속성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협동행위와 관리성은 두 영역에 공통되므로 구별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① X: 일반적인 비교에서 행정은 경영보다 **시장성이 낮고 독점성이 높다**. 기업이 시장의 가격과 경쟁을 통해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행정은 법령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선지는 시장성과 독점성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② O: 행정은 공동목표를 세우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며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합리적·집단적 협동행위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행위이므로, 이는 **행정과 경영의 공통 속성**이다. 진술 자체는 성립하지만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을 묻는 발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행정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집행하므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치성·권력성**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의 속성이므로, 발문이 요구하는 답은 ③이다.

④ O: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력·예산·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조정하는 관리성을 지닌다. 기업의 경영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므로, **관리성은 두 영역의 공통점**이다. 따라서 관리성 자체를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동 원리로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뉴거버넌스론은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② 정부 역할로 신공공관리론은 방향잡기를, 뉴거버넌스론은 노젓기를 강조한다.

③ 관료 역할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업가를, 뉴거버넌스론은 조정자를 강조한다.

④ 관리 기구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을, 뉴거버넌스론은 연계망(네트워크)을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뉴거버넌스론도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노젓기'보다 다양한 참여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방향잡기와 노젓기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의 경영 방식과 시장원리를 행정에 도입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는 이론이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상호 의존적인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중시한다.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한다.
뉴거버넌스론은 어느 한 주체만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참여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통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② X: **두 이론 모두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방향잡기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노젓기는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직접 공급보다 정책 방향 설정과 성과관리를, 뉴거버넌스론은 여러 참여자 사이의 협의와 조정을 중시하므로 뉴거버넌스론이 노젓기를 강조한다는 부분을 방향잡기로 고쳐야 한다.

③ O: 신공공관리론은 관료가 경영자처럼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혁신과 성과 향상을 추구하는 **공공기업가** 역할을 강조한다.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관료가 정부 밖의 여러 참여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돕는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④ O: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계약 등 시장원리를 활용하므로 관리 기구로 **시장**을 중시한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기업·시민사회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자원 교환을 중시하므로 이들을 연결하는 **연계망(네트워크)**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5. 신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② 행정과 행정이론의 현실적합성 또는 적실성 제고를 우선적 과제로 주장했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행정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방법론적 엄격성을 강조했다.

④ 조직발전에 있어 분권화를 지향하는 구조설계를 처방하고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논리실증주의를 토대로 경험적 연구와 방법론의 엄격성을 강조한 것은 행태주의이다. 신행정학은 **가치중립적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현실문제 해결**을 중시했다.

선지별 해설

신행정학은 행정이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규범적·처방적 접근이다.

① O: 신행정학은 능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다.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와 정책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O: 적실성은 행정과 행정이론이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행정학은 연구방법의 정교함에 치우쳐 현실의 불평등과 갈등을 외면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행정 연구와 실무가 당면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X: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하여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행정현상과 엄격한 연구방법을 중시한 것은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신행정학은 이러한 가치중립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하고 형평성·정의 등 가치판단과 현실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경험적 연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 엄격성만으로 행정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④ O: 신행정학은 경직된 계층제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분권화와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직을 지향했다.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높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NoteBase

문 6. 정부실패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 - 독점으로 인한 특권 또는 특혜로 인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

② ‘X-비효율성’ - 경쟁적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

③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

④ ‘주인-대리인 문제’ - 국민(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 추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국민보다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진다. 공무원의 정보 부족이 아니라 **대리인의 정보 우위와 주인의 감시·통제 한계**가 도덕적 해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대추구'는 독점권이나 정부의 특혜로 얻는 이익을 차지하거나 유지하려는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로비 등에 자원이 투입되면 **생산적 활동에 쓰일 자원이 특혜 확보에 소모**되므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② O: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약한 조직에서 비용 절감이나 업무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생기는 관리상의 비효율이다. 조직 내부의 안일한 운영으로 **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달성 가능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③ O: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파급효과**가 생기는 현상이다. 개입의 목적이 바람직하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가 당초 의도와 달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④ X: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공무원인 대리인은 국민인 주인보다 담당 업무와 자신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갖는다. 따라서 선지의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은 **정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고쳐야 한다. 국민이 공무원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 도덕적 해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난다.

NoteBase

문 7.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조직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 공식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제도의 독자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의 이유로 적절성의 논리보다 도구성(결과성)의 논리가 강조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동형화가 강조되고 제도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경로의존성이 과소평가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제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고 본다. 규칙과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상대방 행동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여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부조직의 공식적·법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제도주의의 특징이다. 신제도주의는 법령·조직 같은 공식 제도뿐 아니라 규범·관행 같은 비공식 제도도 분석하며, 제도가 개인의 행동과 정책 결과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을 인정한다.

② X: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변화를 설명할 때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조직은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적합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받아들인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과 기대 결과를 따지는 도구성의 논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더 가깝다.

③ X: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의 제도와 선택이 이후의 선택을 제약하고 제도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조직들이 같은 제도적 환경의 압력과 규범에 대응하면서 구조와 운영방식이 서로 비슷해지는 제도적 동형화는 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한다.

④ O: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 집단 전체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주목한다. 제도는 정보와 규칙,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를 제공하여 상대방 행동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인**한다. 이처럼 제도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8.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분배정책은 정책목표에 의해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② 규제정책은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재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④ 구성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규제로 이익을 얻는 쪽과 불이익을 받는 쪽의 이해가 직접 부딪힌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사이에 제로섬적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지별 해설

① X: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지역에 **자원이나 서비스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조금 지급이나 도로 건설 등이 해당한다. 사업 비용을 조세 등으로 충당할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것을 분배정책의 뜻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② O: 규제정책은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규제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뚜렷하고,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불이익과 연결되는 **제로섬적 성격**이 나타나므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X: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분배정책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치적 현상**이다. 로그롤링은 서로의 사업이나 법안에 대한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포크배럴은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는 행태이다. 분배정책은 편익을 개별 사업별로 나눌 수 있고 비용은 널리 분산되므로 이러한 지지 교환과 지역별 이익 배분이 나타나기 쉽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사이의 소득·부의 배분을 바꾸는 정책으로, 수혜 계층과 부담 계층 간 대립이 두드러진다.

④ X: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의 목적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설치·개편이나 권한 배분 등 **정부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구성정책을 계층 간 소득이전 정책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9.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②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내부접근형은 외부집단이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한다.

④ 동원형은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 등이 문제를 정부의제로 직접 채택시키되 **공중의제화를 추구하지 않는** 유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동원형**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책의제설정은 여러 사회문제 중 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적 검토 대상으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사회문제가 정부의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해결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과 구별된다.

② O: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의 이익집단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과 지지를 넓혀 **공중의제를 정부의제로 발전**시키는 유형이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는 이러한 상향식 의제설정이 나타나기 쉽다.

③ X: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의 관계자나 정책결정자와 긴밀히 연결된 외부집단이 문제를 정부의제로 직접 진입시키는 유형이다. 일반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넓히는 **공중의제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한다'는 부분이 내부접근형과 맞지 않으며, 정부가 의제를 먼저 정한 뒤 홍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원형의 특징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동원형은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의제설정을 주도하여 **정부의제가 먼저 형성된 뒤 공중의제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정부는 이미 설정한 의제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얻기 위해 홍보와 설득을 이어간다.

NoteBase

문 1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Model Ⅱ)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 만족모형은 최적의 대안 선택을 목표로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을 함께 고려한다.
㉣ 합리모형은 부분적·순차적 정책결정과정과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만족모형은 최적의 대안보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며, 계량적 분석과 직관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부분적·순차적 결정과 시행착오에 따른 수정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모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이 불명확하며 참여자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설명한다. 구성원 간 응집성이 약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결합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O: 엘리슨의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집합으로 본다. 각 조직은 자신이 담당하는 문제를 **기존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처리하며,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조직별 활동의 산출물로 설명된다.

㉢ X: 만족모형은 정보와 인지 능력의 한계에 따른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해를 찾기보다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 수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발견하면 선택한다. 합리적·계량적 분석에 직관이나 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결합하여 더 나은 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X: 부분적·순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수정·보완하는 것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과 차이가 작은 대안들을 제한적으로 비교한다. 합리모형은 명확한 목표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안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를 묶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면 정책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① ㉠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형
② ㉠ 지시적 위임형 ㉡ 재량적 실험가형
③ ㉠ 고전적 기술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④ ㉠ 지시적 위임형 ㉡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책결정자가 세부 내용까지 정하고 집행자의 재량을 제한하면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정책목표는 결정자가 정하되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의 폭넓은 재량**을 주면 지시적 위임형이다.

대응 관계 해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역할관계, 특히 집행자에게 위임되는 권한과 재량의 범위에 따라 정책집행 유형을 구분한다.

㉠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결정자가 목표뿐 아니라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정하고 집행과정을 통제한다. 집행자는 정해진 목표를 받아들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므로, 재량은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한정**된다.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책수단 전반을 폭넓게 선택하는 지시적 위임형과는 구별된다.

㉡ 지시적 위임형: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선택하도록 기술적 권한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도 위임받는다. 따라서 이 설명의 핵심은 **정해진 목표 아래 수단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추상적인 목표를 집행자가 구체화하고 수단도 명확히 하는 유형이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정책결정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은 고전적 기술자형, ㉡은 지시적 위임형으로 연결되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소망성,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평가성 사정(평가성 검토)을 말한다.

②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으로 평가목적에 따라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형평성 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형평성 평가는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 간의 배분 등이 공평한지를 평가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답 1번

①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예비평가인 평가성 사정**이다. 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과 성과 등을 본격적으로 평가한다.

②

총괄평가는 **집행 후 정책이 초래한 효과와 영향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정도는 효과성 평가, 투입 비용 대비 성과는 능률성 평가, 효과와 비용 배분의 공정성은 형평성 평가에 해당한다.

③

정책의 총편익이 커도 특정 집단에 비용이 집중되거나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 형평성 평가는 총성과와 별도로 **어느 집단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부담을 지는지**를 비교하여 배분의 공정성을 판단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NoteBase

문 13. 실험의 타당성 위협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사 효과’ - 정책집행 기간 중 외부 환경에서 정책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② ‘모방 효과’ -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③ ‘호오손 효과’ -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④ ‘검사(측정) 효과’ -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받은 사람을 실험집단 구성원으로 선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역사 효과'는 정책집행 중 발생한 **외부 사건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외부 사건의 영향이 정책 자체의 효과와 섞이면 결과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역사 효과'는 정책이나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정책집행 전후에 결과가 달라져도 그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외부 사건 때문인지** 분리하기 어려워지므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한다.

② X: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실험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호오손 효과'**이다. '모방 효과'는 비교집단이 실험집단의 처치 내용을 알게 되어 이를 따라 하는 현상이다. 비교집단에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면 두 집단의 차이가 줄어들어 처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③ X: 효과가 잘 나타날 조건을 갖춘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선택편의'**에 해당한다. 두 집단이 처음부터 다른 조건을 가지므로 사후의 차이를 처치 효과로만 볼 수 없다. '호오손 효과'는 집단을 편향되게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험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의식하여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④ X: 사전 측정에서 유별나게 높거나 낮은 값을 보인 사람을 선정할 때 문제 되는 것은 **'통계적 회귀 효과'**이다. 우연한 요인이나 측정오차가 포함된 극단적인 값은 처치가 없어도 재측정 시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처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 '검사(측정) 효과'는 사전검사를 받은 경험 자체가 학습이나 민감화 등을 일으켜 사후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14. 정책변동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대체는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② 부분종결은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사업내용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혹은 집행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④ 정책혁신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두고** 사업내용·자원 투입·집행절차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운영 내용이 달라져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 이어지면 정책유지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의 일부를 남겨 두고 나머지 일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부분종결**이다. 정책대체는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기존 정책내용이나 수단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② X: 정책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정책내용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은 **정책대체**이다. 부분종결은 기존 정책 중 일부를 폐지하고 다른 일부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내용을 새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과 구별된다.

③ O: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내용,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규모, 집행절차 등을 바꾸더라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책유지에 해당한다.

④ X: 기존 정책의 사업과 예산을 중단하고 대체할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소멸시키는 것은 **정책종결**이다. 정책혁신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을 없애는 정책종결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5. 비공식적(자생적)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성과정에서 조직의 공식적 구조 및 기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조직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이다.

③ 귀속감, 안정감 등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④ 파벌이 조성될 경우 조직의 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비공식조직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지만 **공식적 구조와 기능의 영향도 받는다**. 부서 편성이나 업무상 접촉 관계가 구성원 사이의 친교와 집단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공식조직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공식 규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서 편성, 업무 분담, 구성원 사이의 접촉 기회 등 **공식적 구조와 기능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비공식조직의 형성과정에 공식조직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O: 비공식조직은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거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친분, 공통 관심사,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집단**이다. 공식적인 설치 규정이나 명령이 없어도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③ O: 구성원들은 친밀한 관계와 상호 지지를 통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귀속감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는다. 이처럼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비공식조직의 순기능이다.

④ O: 비공식집단이 파벌을 이루어 **조직 전체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면 집단 간 갈등이 심해지고 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조직의 통합과 균형을 해치는 역기능이다.

NoteBase

문 16.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2001년에 제정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② 지식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조직 구조로의 전환이 제시되기도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식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조직형태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후기기업가조직과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을 들 수 있다.

정답 3번

①

해당 법률은 **2001년 3월 28일 제정**되었다.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였다.

②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지식 공유·협력적 문제해결**을 통해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과 구성원 간 단절 등의 역기능에 대응한다.

③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선지의 행정안전부장관과 5년 단위는 모두 잘못되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 ·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정보기술은 조직 내외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여 유연한 조직형태를 뒷받침한다. 후기기업가조직은 **신속한 행동과 창의적·신축적 운영**을, 공동조직은 **핵심기능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기능을 외부 조직에 맡기는 네트워크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NoteBase

문 17.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 학자인 테일러(Taylor)는 1911년 「과학적 관리의 원리(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를 출간하였다.

②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 수행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③ 테일러는,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고용자는 낮은 노동비용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a first class man)가 달성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④ 스콧(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 따르면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으로 구분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과학적 관리론은 외부 환경보다 조직 내부의 작업 능률과 목표 달성을 중시하므로, 스콧의 분류상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개방-합리적'이라는 분류가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테일러는 1911년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출간하여 과학적 관리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산성을 높여 노동자와 고용자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였다.

② O: 과학적 관리론은 관행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작업 방법을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표준 작업 방법**으로 바꾸려 하였다.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의 각 요소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법과 적정 과업을 정한다.

③ O: 테일러는 **일류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하여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하루 과업**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 조건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제품 한 단위당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있다.

④ X: 스콧의 분류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에 속한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보다 조직 내부의 작업·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조직을 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따라서 '개방-합리적'이라는 분류를 '폐쇄-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조직이론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계로,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② 인간관계론에서의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보다는 사회적·심리적 존재에 가깝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은 인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상황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규정하는 유일한 시각은 없으며, 복잡인(complex man)에 가깝다고 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이 적절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맡으며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다는 설명은 이러한 인간관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의 분업·표준화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생산능률을 높이려 한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보다 **정해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중시하므로, 조직을 기계로 보고 구성원을 그 부품처럼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② O: 인간관계론은 임금 같은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소속감, 인정, 동료와의 관계가 근로 의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을 이익만 계산하는 존재보다는 **집단의 관계와 규범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심리적 존재**로 이해한다.

③ X: 맥그리거의 Y이론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인간이 조직 목표를 위해 자기지시·자기통제를 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성장과 **자아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므로,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은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에 가깝다.

④ O: 체제론·상황론에서는 인간의 욕구와 동기가 개인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복잡인'은 인간을 경제적·사회적·자아실현적 측면 중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 관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단일한 인간관이나 관리 방식보다 **개인차와 상황에 맞는 관리**를 중시한다.

NoteBase

문 1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과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앨더퍼는 매슬로우와 같이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니고 있고, 욕구가 범주화되어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나, 욕구의 충족이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매슬로우의 입장은 부정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ERG이론을 제시하였다.
㉢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위욕구를 추구하는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였다.
㉣ 앨더퍼의 존재욕구(Existence needs)는 생존에 필요한 유형적인 물질에 대한 욕구이며,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보완하면서 욕구의 **고정적인 계층구조를 전제하지 않았고**, 상위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가 강해지는 **좌절-퇴행**을 인정하였다. 존재욕구에는 생리적 욕구와 물질적 안전욕구가 포함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X: 복수의 욕구를 범주화하고 욕구의 순차적 충족을 부정한다는 부분은 ERG 이론에 부합한다. 다만 욕구를 범주화한다는 것과 매슬로우처럼 **고정적인 계층구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다**. 앨더퍼의 존재·관계·성장욕구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고 하위욕구의 충족 없이도 상위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매슬로우와 같은 고정적인 위계를 전제했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 O: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여 ERG 이론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우의 다섯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라는 **세 범주로 재구성**하고 욕구 간 이동을 더 유연하게 설명하였다.

㉢ O: ERG 이론은 하위욕구의 충족에 따라 상위욕구를 추구하는 움직임뿐 아니라,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좌절-퇴행**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성장 기회가 막히면 관계욕구를, 관계욕구 충족이 어려우면 존재욕구를 더 강하게 추구할 수 있다.

㉣ X: 존재욕구는 음식·주거·임금 등 생존과 물질적 안정에 대한 욕구이며,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의 물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충족되는 관계욕구에 속하므로 존재욕구에 포함시킨 부분이 잘못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20. 관료제 비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베블런(Veblen)은 한 가지 기술만 훈련받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관료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거나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이라 하였다.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는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어, 무능한 사람들로 보직이 채워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③ 굴드너(Gouldner)는 관료들이 정해진 규칙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 추구하며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④ 머튼(Merton)은 업무의 분업구조로 인하여 하위조직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처할거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분업으로 하위조직의 특수이익이 전체 조직의 목표보다 앞서는 부처할거주의를 강조한 학자는 **셀즈닉(Selznick)**이다. 머튼은 규칙 준수가 수단을 넘어 목적이 되는 **목표전치**를 중심으로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베블런의 '훈련된 무능'은 특정 업무에 맞추어 익힌 기술과 습관이 다른 업무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응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에 고착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기존 방식만 적용**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된다.

② O: 피터의 원리는 계층제에서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한 구성원이 승진을 거듭하다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직위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현재 직위에서의 유능함이 상위 직위의 유능함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에 이른 사람이 그 직위에 머물면서 무능한 사람들로 보직이 채워질 수 있다.

③ O: 굴드너는 규칙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 수준을 알려 주는 데 주목하였다. 구성원이 **규칙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약해지고, 소극적으로 일하며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난다.

④ X: 분업과 전문화에 따라 하위조직이 전체 조직의 목표보다 자기 부서의 목표와 특수이익을 우선하는 부처할거주의를 강조한 학자는 **셀즈닉(Selznick)**이다. 머튼은 목표 달성의 수단인 규칙 준수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목표전치**와 그에 따른 형식주의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처할거주의에 관한 대표적 논의를 머튼에게 연결한 부분이 부적절하다.

NoteBase

문 21.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갈등의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희소한 자원(예산, 인력 등)은 조직 내 부서 간 경쟁을 유발시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조직의 분업구조는 하위부서 간의 업무특성, 업무수행태도, 문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를 유발하여 부서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조직의 보상시스템은 구조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집단성과급은 집단 내 개인 간의 협력을 유도하지만,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④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수행은 쌍방향 상호의존성을 가진 조직 간의 업무수행에 비해 갈등 관계로 진화하기 쉽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방향 집중형보다 **쌍방향 상호의존성이 높을 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서로의 업무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는 목표나 업무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모든 부서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각 부서가 자기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더 확보하려는 **자원 배분 경쟁**이 생기고, 배분 기준이나 결과를 둘러싸고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분업이 이루어지면 부서마다 담당 업무와 전문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중시하는 목표·업무수행태도·문제해결 방식도 달라진다. 이러한 **부서별 관점과 우선순위의 차이**가 조직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③ O: 집단성과급은 집단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므로 같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집단별 성과와 보상을 중시하면 각 집단이 자기 이익을 우선하여 다른 집단과 경쟁할 수 있으므로, **집단 내 협력과 집단 간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④ X: 일방향 집중형보다 쌍방향 상호의존성이 높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쌍방향 관계에서는 한쪽의 업무수행과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다시 상대방의 대응에 영향을 받으므로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목표나 업무방식이 어긋나면 서로의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선지는 **갈등 가능성의 비교 방향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문 22.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

④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무원은 외부 환경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행정가(specialist)를 양성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강한 신분보장은 무사안일을 낳아 **외부 환경의 요구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 전통적 직업공무원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행정가보다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일반행정가(generalist)**의 양성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생애의 직업으로 삼고 장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① O: 공직을 장기적인 직업으로 삼으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은 봉사정신을 높이고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적된 경험과 업무 지식이 유지되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③ O: 장기근무 과정에서 교육훈련과 다양한 보직 경험을 통해 능력을 폭넓게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업무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량을 키워 **정책결정과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④ X: 강한 신분보장과 폐쇄적인 인사 운영은 무사안일을 낳고 **외부 환경의 요구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계급제와 순환보직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직업공무원제는 특정 분야를 깊이 다루는 전문행정가(specialist)보다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 판단력을 갖춘 **일반행정가(generalist)**의 양성에 유리하다. 따라서 외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행정가를 양성한다는 설명은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NoteBase

문 23. 역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화된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평가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찰이 아닌 추측이나 유추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② 피평가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기법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고 평가자 간의 합의에 의해 평가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역량평가는 추측이나 유추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화된 모의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한다. 관찰된 행동에 근거해 판단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실제 직무와 유사한 상황을 구조화하여 제시한다는 부분은 역량평가의 특징이다. 다만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그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여 역량을 판단한다. 관찰을 대신해 추측이나 유추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며, 구체적인 행동 증거를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주관성을 줄인다.

② O: 역량평가는 이미 달성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앞으로 맡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파악한다. 모의상황에서 현재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하여 미래의 직무수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과거 성과 중심의 평가와 구별된다.

③ O: 역할수행,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 **서로 다른 실행과제를 함께 활용**하면 한 가지 평가기법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역량을 살필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종합하므로 개별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④ O: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관찰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자 간 합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한 평가자의 편견이나 관찰 오류가 결과를 좌우할 위험을 줄이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NoteBase

문 24.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발은 구성원의 적성, 지식, 경험, 능력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조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력개발은 직무가 아닌 직급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급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경력개발 기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보직이동의 기회도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④ 경력개발은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경력 목표와 경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력개발은 **직무와 역량을 중심으로** 경력계획을 세우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직무 대신 직급을 계획과 역량 개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력개발은 개인의 성장 욕구와 조직의 인력 수요를 조화시키면서, 필요한 직무 경험과 역량을 계획적으로 쌓도록 하는 활동이다.

① O: 구성원의 적성·지식·경험·능력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연결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조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② X: 경력계획은 **직급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세우며,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직급의 상승 자체를 중심에 놓으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축적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선지의 두 '직급'을 모두 '직무'로 바로잡아야 한다.

③ O: 경력개발 기회와 보직이동 기회는 **개방성과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에게 개발 기회를 공평하게 열어 주되, 보직이동은 해당 직무의 역량 요건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O: 경력개발은 **구성원 자신의 주도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은 정보를 수집하여 경력 목표와 개발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조직은 직무정보·교육훈련·상담 등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②이다.

NoteBase

문 25. 퇴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관리는 조직 인력의 퇴직 상황을 분석·예측하여 적정 인력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퇴직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퇴직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편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퇴직억제전략으로는 퇴직 전 재직자 경력개발 기회 확대, 직무만족도 향상,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활성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퇴직촉진전략으로는 직무수행성과가 부진한 공무원들을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퇴출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활성화는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므로 **퇴직촉진전략**이다. 퇴직억제전략은 경력개발 기회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재직자가 조직에 계속 남도록 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퇴직관리는 퇴직의 규모·원인·시기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결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 수급에 필요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O: 퇴직은 인건비 절감, 대체인력의 채용·교육훈련 비용 같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남은 구성원의 사기와 대인관계, 조직 분위기 등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퇴직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X: 재직자의 경력개발 기회 확대, 직무만족도 향상, 근로조건 개선은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유인을 높이므로 퇴직억제전략이다. 반면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활성화는 퇴직촉진전략**으로,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④ O: 직무수행성과가 부진한 공무원을 적격심사 등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하는 퇴출은 해당 인력을 조직에서 내보내는 방식이므로 **퇴직촉진전략**에 해당한다.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절차 없이 곧바로 면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6.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보수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다.

④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정답 3번

①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liyp9MMqgvdmzGhSh6NX7t4G3WRA5o7L/view?usp=drivesdk

②

고정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③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비고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 부산 광역시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 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NoteBase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17.7.26>

NoteBase

문 27.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징계의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징계 혐의자인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6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였는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징계위원 A와 B는 '정직 2월', 징계위원 C는 '정직 1월', 징계위원 D는 '감봉 3월', 징계위원 E와 F는 '감봉 2월'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인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로 ( )을 징계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정직 2월

② 정직 1월

③ 감봉 3월

④ 감봉 2월

정답 3번

공통 해설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 순으로 합산하여 과반수에 이른 때의 가장 유리한 의견**을 따른다. 정직 2월 의견 2명에 정직 1월 의견 1명과 감봉 3월 의견 1명을 차례로 더하면 출석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에 이르므로, 감봉 3월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NoteBase

문 28. 쉬크(Schick)의 예산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쉬크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적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규범을 제시하였다.

② 총량적 재정규율은 한 국가의 재정총액을 일정한 한도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③ 배분적 효율성은 정부예산을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각 정책 분야 간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재정의 총체적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④ 운영적 효율성은 각 사업부문에 투입된 예산으로 공공서비스의 산출을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불용액의 이월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운영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 한도 안에서 집행자의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 불용액의 이월을 엄격히 통제하기보다 **일정 범위에서 이월을 허용**하여 예산을 절약할 유인을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쉬크는 예산운영의 규범을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적 효율성으로 구분한다. 각각 재정의 전체 규모, 정책 간 자원배분, 개별 사업의 자원 활용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② O: 총량적 재정규율은 **재정총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통제**하는 규범이다. 개별 사업의 지출 요구를 모두 합산하여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총액을 먼저 정하고 그 한도를 지키도록 한다.

③ O: 배분적 효율성은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규범이다. 중요도와 효과가 낮은 사업에서 높은 사업으로 자원을 재배분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 X: 운영적 효율성이 주어진 예산으로 공공서비스의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을 뜻한다는 부분은 부합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불용액의 이월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부분은 부합하지 않는다. 집행자에게 정해진 예산 한도 안에서 재량을 주고, **미사용 예산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하여 절약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운영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예산총액의 한도나 성과에 대한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NoteBase

문 29. 윌다브스키(Wildavsky)가 분류한 국가유형별 예산 결정행태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 분		경제력	
		낮음	높음
재정 예측력	낮음	㉠	㉡
	높음	㉢	㉣

① ㉠ '반복적 예산 결정행태' -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결정된다.

② ㉡ '추가경정적 예산 결정행태' - 여러 차례 수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③ ㉢ '세입 중심적 예산 결정행태' - 양출제입(量出制入)식으로 결정된다.

④ ㉣ '점증적 예산 결정행태' -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세입 중심적 예산 결정행태는 확보할 수 있는 수입에 맞춰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 방식이다. 지출을 먼저 정하고 수입을 마련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과 방향이 반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윌다브스키는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예산 결정행태를 구분한다. 표의 가로축은 경제력, 세로축은 재정 예측력이다.

① O: ㉠은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이 모두 낮은 경우의 '반복적 예산 결정행태'이다. 재원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수입·지출도 예측하기 어려워, 연초에 정한 예산대로 집행하기보다 **당장의 필요와 가용재원에 따라 수시로 다시 결정**한다.

② O: ㉡은 경제력은 높지만 재정 예측력은 낮은 경우의 '추가경정적 예산 결정행태'이다. 재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필요한 지출 등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이 달라지면 **당초 예산을 여러 차례 수정·보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③ X: ㉢은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은 높은 경우의 '세입 중심적 예산 결정행태'이다. 조달할 수 있는 세입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예상할 수 있지만 재원이 제한되므로, **예상 세입에 맞춰 세출을 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 방식으로 결정한다. 선지의 '양출제입(量出制入)'은 필요한 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수입을 마련하는 방식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④ O: ㉣은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이 모두 높은 경우의 '점증적 예산 결정행태'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존 예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서 소폭 증감**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NoteBase

문 30.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준예산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예산은 사용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제1공화국에서 채택하였다.

④ 잠정예산은 영국, 캐나다 및 일본 등에서 사용되나 우리나라는 채택한 적이 없다.

정답 1번

①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헌법이 정한 경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며, 집행 범위는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NoteBase

③

제1공화국은 예산이 제때 의결되지 못하면 국회가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안에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잠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전 일정 기간의 지출을 의회가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캐나다·일본 등에서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의 가예산제도에 이어 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잠정예산제도는 채택한 적이 없다**.

NoteBase

문 3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③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2, 4번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

NoteBase

③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oteBase

문 32.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 법령 상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는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정부는 예산·기금·결산 등 중요한 재정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정보통신매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6.9>

②

재정정보 공표대상에는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NoteBase

③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을 담당하며, 각각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2021.12.21>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한 공시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통합공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필요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공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NoteBase

문 33. 발생주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 없이 어떤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금의 경우 발생주의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④ 정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만, 회계절차가 복잡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기록**한다. 따라서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도 기록하며, 각각 부채와 자산을 함께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한다. 따라서 수익을 얻었거나 비용이 발생했다면 대금을 아직 받거나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반영한다.

② X: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고, 미수수익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의 수수가 없어도 둘 다 기록**한다. 미지급비용은 비용과 부채로, 미수수익은 수익과 자산으로 반영한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까지 기록하지 않는 것은 현금주의의 처리이다.

③ O: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상각할 금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대손상각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발생주의에서는 이처럼 **당기에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도 인식한다.

④ O: 발생주의는 현금뿐 아니라 미수금·미지급금 등 자산과 부채도 반영하므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 충실하게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자산·부채의 평가와 수익·비용의 기간 배분** 등이 필요하여 현금주의보다 회계절차가 복잡하다.

NoteBase

문 34. 지방자치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긍정하는 브라이스(Bryce)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으로 기능한다.

② 티부(Tiebout) 가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간 경쟁을 심화시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한다.

③ 지방자치는 공공재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

④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력 차이가 지속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지방자치로 공공재 공급이 작은 지역 단위로 나뉘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규모의 경제가 큰 서비스는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공급하거나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브라이스는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경험이 주민의 공공심과 책임 의식을 기르고 민주적 자질을 훈련한다고 보았다. 주민이 가까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처리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제로 익힌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장이 된다.

② O: 티부 가설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부담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로 하는 투표'**를 설명한다. 자유로운 이동, 충분한 정보, 선택 가능한 다수의 지방정부 등의 조건 아래 주민의 지역 선택과 지방정부 간 경쟁은 수요에 맞는 공공재 공급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

③ X: 규모의 경제는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지방정부가 작은 구역별로 시설과 인력을 따로 운영하면 고정비용이 중복되고 이용자 규모가 작아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활용에 유리하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가 큰 공공서비스는 광역적 공급이나 지방정부 간 공동 처리가 유리하다.

④ O: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원과 재원 조달 능력이 다르면 행정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도 달라진다. 이 차이가 지속되고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초래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35.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에 관한 의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제정권한을 갖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송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NoteBase

③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 대상은 **해당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이 아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 · 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NoteBase

문 36.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②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③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장 이용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모두 사용료 수입에 해당한다.

정답 4번

①

사용료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시설·재산의 이용으로 얻는 개별적 편익에 대응한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산을 빌려주어 반복적으로 얻는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재산을 처분하여 얻는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③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수익자에게 이익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NoteBase

④

운동장 이용료는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인 **사용료 수입**이다. 반면 종량제 봉투 판매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수수료 수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NoteBase

문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직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인·허가 담당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지정 · 등록, 등재 · 인정 · 증명, 신고 · 심사, 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NoteBase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과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감사원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고위공직자가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8. 지능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포데믹스의 문제는 정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②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사회에서 정보획득과 참여, 전자정부 기반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디지털 소외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

③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은 전자판옵티콘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④ 정보의 활용과 교환의 증가에 비례한 적절한 보호 제도 등 안전장치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인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택적 정보접촉은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골라 접하는 경향**이다. 전자판옵티콘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감시·통제**를 뜻하므로 두 개념은 같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포데믹스는 허위·왜곡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신뢰할 만한 정보의 식별을 어렵게 하고 사실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왜곡하므로, 정부가 정확한 근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② O: 정보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통신망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정보 획득과 사회 참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될수록 **접근·활용 능력의 격차가 서비스 이용의 격차**로 이어져 디지털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③ X: 선택적 정보접촉은 자신의 기존 신념·태도를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피하려는 경향으로, **어떤 정보를 선택해 접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판옵티콘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와 행동을 수집·추적하고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자판옵티콘의 핵심은 **정보기술을 통한 감시**이며 선택적 정보접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④ O: 개인정보의 활용과 교환이 늘어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이용 제한·접근 통제·보안 조치 등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두 개념을 동일시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39.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론보다 신공공관리론이 환영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①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2021.1.12>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 · 확정

②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NoteBase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3.27>

④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뉴거버넌스론**에 더 부합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경쟁과 성과·효율성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40.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다.

② 이명박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출범하였다.

③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였다.

④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중앙인사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신설**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이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로 기능을 통합했으므로, 신설한 정부를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1일 소방·재난관리·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다. 두 개편 모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② X: 중앙인사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신설**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이므로, 선지에서 잘못된 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③ O: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기관장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였다.

④ O: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어 출범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022년 9월 2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였다. 두 조치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NoteBase